

〈후속보도자료〉

전북지역 교육현장 디지털 성범죄 해결 촉구! 시민사회 및 정당 기자회견

● 2021. 6. 30. 오전 10시

● 전라북도교육청 앞

● 기자회견 순서

- 경과 보고 : 양민주 (전교조전북지부 여성위원장)
- 발언1 :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
- 발언2 : 달리 (불법촬영근절을위한시민연대 참여자 / *대독 : 정다루)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옥진 (전교조전북지부 지부장), 김형선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윤수진 (익산여성의전화 활동가), 최장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최단위

군산여성의전화,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익산여성의전화,
전교조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교조여성위원회, 전교조경기지부여성위, 전교조광주지부여성위,
전교조대구지부여성위,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 전교조인천지부여성위, 전교조전남지부여성위,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충남지부여성위, 전교조충북지부여성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바스락,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책방토닥토닥 (총 36개 단위)

[기자회견문]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학생·교직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최근 남원에서 중학교 남학생 10여 명이 2019년부터 운영한 불법촬영 공유 단체 대화방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공유했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여교사 등 주변 여성들의 외모를 폄평하거나 성희롱하는 발언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전북 지역 내에서 이러한 성범죄가 교육 현장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진 현실에 심각하게 우려를 하며 전라북도교육청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역 교육현장에서 불법촬영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다수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조치가 되는가 하면, 올해는 동료 여학생들이 있는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조사를 받는 일이 언론에 보도됐다. 사건화 되지 않은 사안들까지 감안하면 특정 지역과 학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직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 8주년을 맞이하고 성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전북교육청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난 기간 공론화된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일상을 깊게 파고들었다. 특히 10대 여성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n번방’ 공론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의 피·가해 연령이 모두 낮아지는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성폭력은 명백히 가해자의 잘못과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온라인의 특성상 반복되는 피해 때문에 삶이 더욱 위축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더구나 가해자가 본인과 가까운 지인, 친구인 경우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회복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헌법 제32조 3항은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4항은 여성 노동자가 노동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은 교육 현장이 노동자의 존엄함과 성평등이 보장되는 일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실현해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존엄한 일터,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사건 파악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징계는 당연하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가 아닌’, 남성들이 ‘단순한 호기심’, ‘놀이문화’로 취급해왔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권침해와 폭력은 더욱 커졌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자랐다’는 비판은 비단 사법부에만 해당하지 않음을 환기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책도 만들어져야 한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좁은 지역 사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일상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대책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와 문화에 대한 성찰하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n번방’ 성착취 주동자와 가담자 중 10~20대 남성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은 교육이 디지털 성범죄를 확산하고 공고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주동자, 가담자, 동조자, 방조자가 되지 않으며, 성폭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동료시민이 되어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과 강간 문화 및 성착취 구조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과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내의 위계를 강화하는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누구라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대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역의 페미니즘·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와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하나, 피해자중심주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피해 조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하라!

하나, 지역사회와 디지털 성폭력 특성을 감안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성평등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모든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실시하라!

하나,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성폭력 대응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갖춘 대응체계를 즉각 마련하고 실행에 나서라!

2021. 6. 30.

전북지역 교육현장 디지털 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 <주요 요구사항>

※ 전체적인 방향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과 환경이 되도록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

● 일상이 성평등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라.

- * 교육감 직속의 성평등팀 신설, 성인권정책전문관 제도 운영.
- 여성계, 학계, 관련 전문가 단체와 상시적인 협업체계구성.
-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시대정신에 따른 성평등 교육환경 및 조직문화 구성하라.

- * 관련 조례, 지침 등 마련되었으나 담당 및 구성원의 인식제고와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함.
- 학교 내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립 및 실행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확대.
- 적극적 성평등 교육정책 추진.
- 1회성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지양하고 일상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도록 성평등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자치 규약 표준안 개발 및 보급.

● 내실 있는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내용을 구성하라.

- 생물학(보건) 및 인성중심의 2015성교육표준안 지양하고 성평등·인권적 차원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교 성교육 내실화 지원.
- 성인권 교육 추진, 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 통합적·체계적인 성폭력 사안처리 체계를 확보하라.

- * 누구라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와 피해 구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구축.
- 성폭력 신고체계 활성화,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활성화, 스쿨미투 발생학교의 회복 교육 운영과 지원 확보.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성폭력피해자 위기대응팀 구성하고 초기지원에서 사후관리, 공동체 교육진행 까지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별첨2] 남원지역에서 게시된 불법촬영 문제 규탄 현수막



※ 출처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별첨3] <기자회견 발언문>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2018년 8월 혜화역 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불법촬영 한 수많은 남성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잡아서 처벌 할 의지도 보이지 않던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7만이 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4차에 걸친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 뒤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많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영구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법촬영물이 가진 특성이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상이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런 디지털성범죄가 다른 아닌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환경이, 시스템이 바뀌어야만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애가 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을 하는 가해자 측근의 말은 결국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기기를 접한 지금의 10대에게 디지털성범죄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방역해야 할 때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는 것처럼, 촬영물은 원본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공되고 편집되어 재유포 되는 고통은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삭제, 교육, 궁극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스템변화입니다.

언론에서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지마세요. 불법촬영을 ‘몰카’ ‘재미’ 라는 부적절한 말로 사소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2차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그리고 교육청이, 그리고 시민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코로나19만큼 ‘위기상황’임을 각성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포르노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결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 발언자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권지현

[별첨4] <기자회견 대독문>

2000년대 이후 우리는 불법촬영물이 ‘국산야동’으로 유통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사건, n번방 사건, 웰컴 투 비디오까지- 성폭력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온라인은 성착취의 온상이 된 실태입니다. 작년 서울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90여 명을 상담, 조사한 결과 96%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2017년 유튜브에는 초등남아를 중심으로 ‘엄마몰카’ 영상 콘텐츠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세상에서 아동, 청소년들은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남자중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공론화 되자마자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 쓴 지역언론사의 2차 가해성 보도를 접하고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이나 여론이 오염될까 우려되었고,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바라는 이웃들과 함께 ‘불법촬영근절을위한시민연대’를 꾸리고, 지역에서 현수막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하루 만에 100만 원 가까이 모금되어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현수막이 남원시내 곳곳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고,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일상의 안정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학교, 친구들을 더 불신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의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성폭력에 반대하고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가진 인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줄 책임자, 리더, 이웃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은 너무 조용합니다. 시끄러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걱정하는 목소리조차 경계하며 침묵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 종용하는 분위기, 사건을 거론하는 자체가 지역의 이름에 해가 되는 것이라 착각하는 입장, 가해자나 사건 관련자들과 엇힐까 봐 알아서 조심하게 되는 태도 같은 것들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가해자 개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개개인의 관계나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은 지역 공동체의 문제이기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 성폭력 사건의 파.가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성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 남원 불법촬영사건이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촬영근절을위한시민연대> 참여자 달리 드림 / 대독: 정다루(성평등청소년인권연대)